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세미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재조명과 한국정치의 쟁점

| 일시 | 2014년 **12월 29일** (월) 13:3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국회의장 정의화

| 주관 | 아주대 세계학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Program

개회식 (13:30~14:00)

개 회 사 **정의화** 국회의장

환 영 사 **안재홍** 아주대 세계학연구소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세미나 (14:00~16:00)

사 회 **안재홍** 아주대 세계학연구소장

발 제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신복룡 前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정치학)

토 론 **이정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유성엽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Contents

환 영 사

안재홍 아주대 세계학연구소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발 제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신복룡 前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정치학) 3

토 론

이정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25

유성엽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28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37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41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5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51

환영사

안 재 흥 (아주대 세계학연구소장)

사회적 통합이 우리 사회가 실현해야 할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 사회뿐만이 아니라 관련 학계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대 세계학연구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회통합의 시각에서 복지와 민주주의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탐구에서 부딪친 질문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 영역을 망라해 공유되고 있는 의미의 세계에서는 과거로부터 무엇이 전승되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사회과학은 서구의 근대 학문에 경도된 나머지 해방 이후 한국의 근대화 연구에 집중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현재에 과거의 유산이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역사학은 조선시대, 일부는 일제 강점기까지를 연구 대상의 시기로 삼고 있는 반면 사회과학은 근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1945년 해방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현재에 대한 이해에 있어 혼선과 혼동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연장선에서 현재를 이해하려는 접근이나, 그 반대로 현재에는 과거가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가를 추적하려는 접근이 외면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간의 지평을 넓혀 동학혁명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정치학자로서 평생 한국사 연구에 천착하신 신복룡 교수님을 발표자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토론자로는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국회의원에서 경제학 및 동학혁명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타자의 눈으로 우리와 현재를 성찰해보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저희 연구소를 초대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과 임성호 입법조사처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사

임 성 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날의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회의를 주최해 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학술회의는 개최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학술회의를 함께 준비해주신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의 안재홍 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신복룡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정현, 유성엽 의원님과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하고 부패한 체제에 맞서 봉기한 농민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오늘의 민주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1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전히 작지 않습니다. 정치·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또한 1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아주대 세계학연구소의 안재홍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한국정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세미나

발 제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신복룡 前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정치학)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신복룡 前건국대학교 석좌교수 (정치학)

“동학도들은 민권주의자들입니다.”

- 안핵사 어윤중(魚允中)의 장계¹⁾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²⁾

- 왕양명(王陽明)

1. 머리말 :

- 역사는 발전하는가? 그 윤회(輪廻)의 역설(逆說) -

소중한 잔치 자리, 동학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더욱이 발제 강연을 맡아 영광스럽습니다. 본디 발제 강연이란 학문과 덕망이 높은 분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과분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기는 했지만, 이런 기회에 그동안 동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소회(所懷)를 피력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싶었고,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하여 평소 하고 싶었던 말도 있던 차에 이 자리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인이 권력과 인연을 끊고 살라는 법은 없지만 이 자리에 청탁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선뜻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생애에 처음으로 권력 기관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비구니가 대궐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³⁾이라 하신 불가(佛家)의 말씀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얼마나 모질고 소신껏 말할

1) 『梅泉野錄』 卷1(下) 甲午 以前 癸巳 4월조.

2) 『王陽明全集』(22) 送別省吾林都憲序: “今天下之不治 …… 由於學術之不明.”

3) 『大藏經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16)(서울 : 동국대학교역경원, 2004), pp. 421-423 : “突入王宮學處.”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간 안에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감사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자가 정치인을 만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 (1) 그 정치인이 열린 귀를 가졌는가?
- (2) 그 정치인이 최소한의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있는가?
- (3) 그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는가?

저는 위의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다가 발표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 의식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왜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에 대하여 “지나온 길을 들려줌으로써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주고 싶다.”⁴⁾는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2) 동학은 왜 일어났으며, 그들이 위정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3)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이 나라의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역사는 늘 격동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식자(識者)로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⁵⁾고 황현(黃玹) 선생은 탄식한 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식인의 언행이 직실(直實)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동학을 음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동학과 청일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는 1894년의 시대적 상황은 12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는

4) 『論語』「學而」：“子曰 告諸往 而知來者。”

5) 黃玹의 絕命詩：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도 눈을 찌푸리는데

무궁화 강산은 이미 더럽혀졌구나.

가을 등잔 밑에 책을 덮고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한 시대에 배운 사람 노릇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鳥獸哀鳴海嶽嘸 槿花世界已沈淪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梅泉野錄』(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71), 신석호, 「해설」(p. 3).

이유는 그 시대를 되돌아봄으로써 지금 우리의 위상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동학과 청일전쟁은 대한제국멸망사의 서막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멸망을 단일 인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의 멸망에서 내재적 모순이 국가 멸망의 일차적 변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청일전쟁은 일본의 대륙 진출의 첫걸음인 동시에 조선 멸망의 시발로 기산(起算)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동학과 청일전쟁은 당시 한국의 북방 관계뿐만 아니라 청일관계, 러일관계, 그리고 미일관계 사이에 난마처럼 얽힌 이해(利害)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상황이 이 시대에 재현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2. 왜 민란은 일어나는가?

1) 부패와 수탈의 고리

민란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는 “가치 박탈에 대한 무장된 저항”이라고 풀이합니다. 그 가치 박탈은 대체로 위정자들의 악의에 찬 수탈과 부패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부패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태초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했습니다. 부패 없는 사회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우리는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어떤 제어 규정이 생기면 곧 이어 그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그 법의 집행자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인(動因)이 발생합니다.⁶⁾ 그런 점에서 법으로써 부패를 제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패의 논리를 1894년의 정황에 적용해보면, 전봉준(全奉準)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됩니다.

(1) 세칭 만석보(萬石湫)의 수세(水稅)를 마구 거두어 들였습니다.

(2) 조병갑(趙秉甲)은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경평야의 미개간지를 개간토록 지시하고서 당년부터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3) 동민들이 불효를 했거나 동기간에 부목(不睦)했거나 간음했거나 도박을 한 데 대한 벌과금의 이름으로 수탈했습니다.

6) Edward C. Banfield, “Corrup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6, No. 3(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5), p. 595.

(4) 조병갑이 아버지인 조규순(趙奎淳)이 태인(泰仁) 군수를 역임하면서 선치(善治)를 했으므로 그 공덕비를 세우면서 동민들에게 추렘했습니다.

(5) 조병갑은 대동미의 명목으로 추수기에는 정백미(精白米)를 거두어들이고 정부에 상납할 때는 나쁜 쌀[麤米]를 보냄으로써 차액을 착복했습니다.⁷⁾

백성들은 관리의 수탈에 대하여 “양해할 수 있는 선”(permitted level)을 그려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눈을 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⁸⁾ 그러나 1894년의 상황은 이미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고, 생존의 차원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가치 배분의 실패

앞서 말한 수탈은 적극적 의미로서의 가치 박탈이지만 소극적 의미로서의 가치 박탈이 있는데 이를 상대적 가치박탈감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치 배분의 실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토지 분배의 실패입니다.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나누어주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재물이며 농업 사회에서 재물은 일차적으로 토지였습니다.⁹⁾ 고려의 토지제도에 따르면 도지(賭地)를 받을 권리를 사사로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여러 대를 거친 뒤에는 사전(私田)으로 변질되면서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收租地)가 모자라 지방의 관료들은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의 대립이 일어났고, 그것이 폭발한 것이 이성계(李成桂)를 중심으로 하는 변방 무사들의 정변이었습니다.¹⁰⁾

토지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도전(鄭道傳)은 이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부패를 제거하고 재정을 절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혁신 세력들이 토지 개혁을 단행했던 이면에는 고려 말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고 신진 세력과 새로운 왕조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¹¹⁾ 그러나 이 토지제도는 토

7) 『全捧準供招 初招問目』

8) Edward C. Banfield, “Corrup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pp. 589–590, 594.

9) 『星湖僊說』(10) 人事門 田制.

10) 이익주, 「정도전의 혁신리더십 : 개혁에서 건국까지」,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서울 : 문화재청, 2005), p. 17.

지상속제로 말미암아 전국 농토의 절반 이상이 사대부에게 돌아가 나라의 경비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¹²⁾

조선사에서 토지 집중이 강화된 것은 장자상속제(primogeniture)와 관련이 깊습니다. 장자 상속은 가문의 재산(토지)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이로써 가세의 응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곧 재산을 1/n식(n=자식의 수)으로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속하는 제도는 가문의 토지 해체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가문의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균분 상속의 사회에서는 비효통(費孝通, Fei, Hsiao-tung)의 주장처럼 “토지가 토지를 낳지 않는다.”(Land breeds no land)¹³⁾는 말이 맞지만 장자 상속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토지를 낳기 때문에” 토지의 검병이 가속화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토지제도는 중국의 경우와 다릅니다. 경지 면적이 좁은 한국에서 땅은 “영혼과 같은 것”(spiritual thing)이었습니다.

3) 신분의 벽

앞서 말씀드린 가치 배분의 실패라는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의 명에였습니다. 동학의 창교자 최제우(崔濟愚) 선생이나 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 선생, 그리고 3세 교주 손병희(孫秉熙) 선생이 모두 서출이거나 하층민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교의 통치학은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을 위한 규범이지 피지배 계급을 두둔할 뜻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분의 숭상(尙名)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학은 본질적으로 신분 질서의 벽을 허물 뜻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철저함은 이미 『예기』(禮記)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계율이었습니다. 곧 “예(禮)는 서인(庶人)에게 내려가지 않고 형벌은 대부(大夫)에게 올라가지 않는다.”¹⁴⁾는 율법은 양보할 수 없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공자(孔子)가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고민한 가치는 “질서를 지키는 일”[序]이었습니다. “귀천의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¹⁵⁾라고 공자는 묻습니다. 차별은 인간 관계에서 따름과 좃음[隨從]을 뜻합니다. 이는 유교에서 물러설 수 없는 명제였습니다. 조선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유교적 예치(禮治)를 구현하기 위한 신분법이었습니다.

신분의 명에, 특히 신분의 상징인 토지를 갖지 않은 농민이 겪어야 하는 아픔은 견디기

11) 최연식, 『창업과 수성의 정치사상』(서울 : 집문당, 2003), p. 230.

12) 『磻溪隨錄』(1) 田制(上) 分田定稅節目.

13) Karl A. Wittfogel, *Oriental Despotism*(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8), pp. 80-81.

14) 『禮記』(1) 曲禮(上) :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15) 『春秋』 昭公(7) 29년 겨울 : “仲尼曰 貴賤無序 何以爲國”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하층 농민 계급에 대한 인권 침해의 현상을 들어보면,

- (1) 토지 이탈의 불허
- (2)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피휘(避諱)
- (3) 두로(斗棰, 말과 되) 색대(竹針)의 조작에 의한 착취
- (4) 사형(私刑, lynch)¹⁶⁾
- (5) 초야권(初夜權)¹⁷⁾

등이 있었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니, “백성이 나라의 근본”¹⁸⁾이니 하는 수사(修辭)와는 달리 농민은 가축과 인간 사이의 7부 능선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한(恨)은 너무 절절했지만 호소할 길도 없었고, 나아질 기미도 없었습니다. 조병갑의 탐학(貪虐)을 진정(陳情)하려던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全彰赫)은 조병갑의 모친상에 부의(賻儀) 추렴을 거절했다가 명석마름으로 죽었습니다.¹⁹⁾ 보은 집회(1893) 당시에 안핵사(按覈使)로 현지에 파견된 어윤중(魚允中)이 “동학이야말로 당시 흔히 말하던 비도(匪徒)가 아니라 민권주의자였다.”²⁰⁾는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대화에는 신분의 해방에 따른 사회적 분화와 기회의 부여라는 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학은 한국 근대화의 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차별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론하지 말아야 할 3대 금기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문중(門中)의 문제이고, 둘째는 지방색의 문제이고, 셋째는 종교의 문제이지만, 이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만은 없고 누구인가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위의 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감정의 중심에는 호남 차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학의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화두입니다. 이런 고민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곧, 한말에 민중의 아픔을 대변한 3대 신흥종교인 동학혁명, 증산교(甑山敎) 그리고 원불교(圓佛敎)가 모두 전주 반경 100km 지점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 傅衣凌, 「明末 남방의 佃變과 奴變」, 양필승(편자),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서울 : 한나래, 1991), pp. 281-289.

17) 고병찬, 『고병찬 가족 연대기』(서울 : 푸른별, 2008), pp. 92-93 참조.

18) 『書經』 「夏書 五子之歌」 : “民惟邦本 本固邦寧.”

19) 吳知詠, 『東學史』(서울 : 영창서관, 1940), pp. 103-104; 李敦化, 『天道敎創建史』(2)(서울 :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p. 57; 張奉善, 「全球準實記」, 『井邑郡誌』(정읍 : 이로재, 1936), pp. 381-382.

20) 『梅泉野錄』 卷1(下) 甲午 以前 癸巳 4월조; “允中前後狀啓 指東學 不曰匪徒 而曰民黨 有若泰西之民權者”

호남의 아픔은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참혹한 살육²¹⁾에서 비롯하여, 존재하지도 않았던 왕건(王建)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빙자하여 호남을 기피했던 사실²²⁾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을 이어오던 호남 기피는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에 이르면 “호남은 땅이 멀고 풍속이 더러워 가히 사람 살 곳이 못되며, 사람들 또한 교활하다.”²³⁾고 말합니다. 이중환은 외갓집이 고창(高敞)의 함양 오씨(咸陽 吳氏)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리지』를 쓰면서 호남을 답사하지도 않고 호남을 혐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목호룡(睦虎龍)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광산(光州)을 기반으로 하는 노론(老論)의 박해를 받아 3년 동안 원악(遠惡)의 땅에서 귀양살이를 했고 그 후 30년 동안 좌절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²⁴⁾

이러한 풍수 의식과 관련하여 호남에서 있었던 몇 건의 민란은 그 본래의 정신과는 관계없이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여 호남을 역향(逆鄉)으로 보려는 사시(斜視)를 형성했습니다. 이를테면 정여립(鄭汝立, 1589)은 왕의 세습을 부인하는 중세적 공화주의를 역사상 최초로 주장함으로써 “호남은 역향(逆鄉)”이라는 논리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옥남(玉男)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호를 거점(去點 : 玉에서 점을 지움)이라고 지어줌으로써 공화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²⁵⁾

정여립 사건은 임진왜란 후의 논공행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남의 의병(義兵)은 영남의 의병에 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통일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김덕령(金德齡)·정충신(鄭忠臣)·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등의 임진왜란 공신들이 호남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논개(論介)가 장수(長水) 출신이었고, 이순신(李舜臣)은 왜란 전(1589-1590)에 정음의 현감을 지낸 적이 있는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²⁶⁾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순절(殉節)한 동래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은 고부 출신이며, 의성(義城) 김 씨의 문족으로서 전라도 북부 지방의 의병을 지도한 김제민(金齊閔)도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이 호남을 가리켜, “이 땅에 호남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도 없었을 것”(若無湖南

21) 『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王 11년(642) 겨울조; 太宗 7년(660) 7월 13일조; 太宗 8년(661) 6월조

22) 훈요십조가 위작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1) 『고려사』 태조편이 거란의 침략 때 모두 불타 없어졌고, (2) 훈요십조를 보관해 왔다는 최항(崔沆)과 최제안(崔齊安)이 신라인 후예였고, (3) 왕건은 백제인을 미워하지 않고 중용했고, (4) 호남을 기피했다면 걸안의 침입 당시 고려 왕 현종(顯宗)이 굳이 호남으로 피난했을 이유가 없고, (5) 왕건으로부터 훈요십조를 받았다는 박술희(朴述熙)가 후백제 사람이었고, (6) 금강을 배산역수(背山逆水)로 보는 데에는 기하학적 모순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쟁은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하)(서울 : 지식산업사, 2011), pp. 167-170 참조.

23)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編

24) 宋俊浩, 『조선사회사연구』(서울 : 일조각, 1987), pp. 329-334, 341; 이희권, 「이중환의 전라도 인식」, 『전북학연구』(I)(전주 : 전라북도청, 1997), pp. 156-158.

25) 鄭汝立의 난에 관해서는,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하), pp. 167-170 참조.

26) 『선조수정실록』 22년 12월 갑술조; 23년 8월 경오조.

是無國家)²⁷⁾이라고 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인들은 정여립의 잔당이라 하여 임진왜란 이후의 논공행상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오래 전부터 “인재가 많은 땅과 절의가 있다고 이름난 고장이 변하여 천향(賤鄉)이 되고 점차로 흘러 귀역(鬼域)이 되어, 재주 있고 민첩한 사람이 그대로 침체되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였으니”²⁸⁾ 이것은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남 박해의 또 다른 원인은 이곳이 곡창 지대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민란이 일어나는 토지는 비옥했습니다.²⁹⁾ 민란의 주역인 농민들은 “처음부터” 굶주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풍요를 맛보았으나 어떤 기회에 가치가 박탈된 사람들입니다.³⁰⁾ 애당초에서부터 굶주릴 만큼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치 박탈의 여지도 없고 따라서 민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³¹⁾ 조선조 후기 3대 민란이 이러한 곳은 만경(萬頃)평야, 김해(金海)평야, 연백(延白)평야였습니다. 만경평야의 옥답(沃畝)은 이곳에 부임하는 방백 수령들의 물욕을 자극했고 호남인들은 곡창에 산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풍년에 배고픈 민생이었습니다. “지리는 역사를 그리는 화판(畫版)”³²⁾이라는 말이 있듯이, 호남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지리적 배경은 동학의 변창과 전봉준의 봉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4) 조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1890년대 극동의 사조를 보면, 일본은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인한 발전과 아울러 그에 못지않은 내재적 모순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치유신(1868)을 치른 뒤에 오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과 정치적 불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장이 해제된 사무라이들의 사회경제적 불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은급(恩給)이 끊어진 그들은 마비키(間引, まびき)³³⁾라는 방법으로 영아(嬰兒)를 살해하거나 신분이 낮은 부잣집에 입양되어 부모에게는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자신은 재산을 얻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 몰락의 울분을 해결해 줄

27) 『충무공전서』(15) 「書」 「사헌부 지평 현덕승(玄德升)에게 보낸 편지」(1594년 4월)

28) 황헌(著), 김종일(역), 『梧下記聞』(서울 : 역사비평사, 1994), p. 62.

29) Roland Mousnier, *Peasant Uprisings in 17th Century : France, Russia and China*(London : Harper & Row Pub. Inc., 1971), p. 337.

30) Guenter Lewy, *Religion and Revolution*(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p. 114-5.

31) *Ibid.*, p. 251.

32) Clarence N. Weems(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I(New York :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p. v : Introductory Note.

33) 마비키(間引)라 함은 생계가 어려워진 사무라이들이 자식들 가운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마치 모판에서 병든 새순을 뽑아내듯이 속아내어 죽이는 방법을 뜻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정자들은 대만(臺灣)을 정복(1874)했지만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내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최후의 방편은 조선정벌론(征韓論)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교묘한 지원을 받은 우익들, 이를테면 “아마데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음우(陰佑)를 입은 협객”이라는 천우협(天佑俠)이나 “검푸른 바다(玄海灘)을 건너가자”는 취지로 조직된 현양사(玄洋社), 그리고 일본의 북쪽 국경은 흑룡강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취지로 조직된 흑룡회(黑龍會)와 같은 국수주의 청년들이 조선의 불안을 틈타 내정에 간섭하고 끝내 조선이 청일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이제 국수주의에 빠진 일본 우익 청년들은 동학군을 적군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우익 문필가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의 이른바 “조선의 십자군전쟁”(十字軍戰爭)³⁴⁾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자리는 동학군의 전황을 소상하게 담론할 게재가 아니어서 더 논의를 할 수 없습디만, 결국 3만 명의 동학군은 야마구치(山口)현 히코시마(彦島)의 수비대 보병 제19대대의 미나미 쇼시로(南少四郎) 소좌가 이끄는 617명(실전 156명, 비전투원 460명)의 크루프기관총 부대에게 섬멸됨으로써 혁명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³⁵⁾

역사에는 아쉬움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결과는 필연의 측면이 있다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에는 통한의 회오(悔悟)가 담겨 있는데,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보기 위해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오혁명은 그 투쟁 목표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족 운동이란 외세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내정 개혁을 위한 투쟁과, 신분계급적 갈등과 같은 내재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복합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안팎의 적을 맞아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내적 투쟁에서 그들은 조정으로부터 외세에 의한 탄압보다 더 가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2) 농민군은 비조직적이었고 지도 세력의 리더십은 미숙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농민 운동은 전통적 유산과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이러한 약점은 결국 현대적 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3) 그들의 종교적 이상주의는 개인 구원을 집단 구원으로 유도함으로써 민중이 움직일

34)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서울: 鷄鳴社, 1939), p. 232.

35) 『동학당 征討 공로자에 대한 논공 건의 건: 제19대대 공적 상신 내역』, 『일본공사관기록』(6)(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pp. 59, 73-91. 이들 가운데 실제로 교전을 수행한 부대는 중대장 모리오 마사카츠(森尾雅一), 대위가 이끌던 2중대 병력이었다.

수 있는 계기와 에너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초연한 의지는 그들의 투쟁을 가열시킬 수 있지만 반면에 전략 개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같은 비정한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기도만으로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동학농민운동은 왕조의 피로기에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지배 계급의 의지와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환(外患)까지 겹치자 종묘와 사직을 지키려고 했던 민중 운동이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망국으로 접어든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공화정으로의 확산을 도모하지 못한 역사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화의 기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3. 왜 이 시대에 동학을 다시 이야기하는가?

- 청산되지 않은 아픔 -

동학혁명과 청일 전쟁이 지난 지 120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는 얼마나 바뀌고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란 결국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되돌아보는 것”(reflecting facts what really happened)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외침을 지금의 현실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부패의 문제

역사학을 공부하노라면 원초적인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는 발전[진화]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의 철학(Philosophie der Hoffnung)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사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 발전의 역기능은 특히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패의 문제입니다. 많은 혁명과 개혁 세력이 등장하여 공익(public interest)과 정의 구현을 내세우면서 “더 좋은 삶”을 약속했지만 부패는 늘 업장(業障)처럼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2013)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55/100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 수준이며,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는 28개국 가운데 13위(7.9/10점)입니다.³⁶⁾ 정치 자금이나 뇌물, 탈세를 통한 지하 경제의 규모는 보는 이에 따라 GDP의 25-40%에 이르고 있습니다.³⁷⁾ 정치인이 청렴하리라는 기대는 오래 전에 사라졌고, “정치인은 모두가 정직하지 않다.”(All politicians are crooked)³⁸⁾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며, 그들은 잠재적 부패자(potential corrupter)³⁹⁾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카터 대통령(Jimmy Carter)은 이제 의회가 “매물”(賣物, Congress is bought.)이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습니다.⁴⁰⁾

그렇다면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도덕적 호소와 담론은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데 부패는 왜 늘어나는가?

(1) 돈에 대한 욕망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패는 영혼을 파는 댓가로 세상을 품에 안겨줍니다.⁴¹⁾ 성공한 부패의 맛은 어느 것보다도 달콤하고 수익성(profit margin)이 높아 매우 유혹적입니다.⁴²⁾

(2) 부패는 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행정을 편의롭게 하며 통치 기능을 증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⁴³⁾ 그러면서 그들은 “증류수에서는 고기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3) 음지 식물이자 혐기성(厭氣性) 세균과 같은 것이어서 잘 들어나지 않으며, 공생(共生)의 음모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노출 위험이 적습니다.

(4) 부패의 지나친 감시는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5) 부패를 감소시키려는 방법은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부패 방지 비용이 부패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경우도 있습니다.⁴⁴⁾

36)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KOR_DataResearch_SurveysIndices(2012. 10. 15.)

37) 崔洸, 『한국의 지하 경제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1987), passim.

38) Amitai Etzioni, *The Spirit of Community*(New York : Touchstone, 1993), p. 211.

39) Edward C. Banfield, “Corrup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p. 600.

40) Amitai Etzioni, *The Spirit of Community*, p. 211.

41) J.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i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1, No. 2(1967), p. 417.

42) 박철현,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p. 21, 29-30.

43) J.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p. 419-421.

44) Edward C. Banfield, “Corrup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pp. 589-560.

이와 같은 논리는 결코 부패를 변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부패를 막아주는 것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가 독립변수이고 시스템이 종속변수입니다. 따라서 최고통치권자가 관료의 장악에 실패했을 때 부패는 보편화되고 죄의식이 감소됩니다. 한비자(韓非子)의 경고처럼, 훌륭한 지도자는 관료를 다스리는 것이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⁴⁵⁾ 영웅사관으로 역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 시드니 후크(Sydney Hook)의 말했듯이, 한 민족의 역사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그 민족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 상황의 예는 무수히 많았습니다.⁴⁶⁾

시스템과 관련하여,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2014년도 지방의회선거 후보자 가운데 40%, 당선자 가운데 35.9%가 전과자였으며, 전과 9범도 있다는 사실⁴⁷⁾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수(指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말았어야 할 무리들, 이를테면, 교육, 종교, 사직(司直)이 모두 부패의 먹이사슬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감시자라 할 수 있는 의회마저 부패할 경우, 우리는 2천 년 전에 로마의 위정자들이 푸념했던 고민 곧,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2) 분배 정의의 문제

인간의 역사를 경제투쟁설로 볼 일만은 아니지만 인간의 갈등은 결국 가지려는 욕심(shaping)과 나누어 달라는 요구(sharing)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부족함”에 대하여 늘 불평하는 것은 아니며, “고르지 못함”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자(孔子)께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 염유(冉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재물이 적은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게 분배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고, 가난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백성이 편안을 누리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개 고르게 분배되면 가난을 느끼지 않고, 화목하면 적다고 느끼지 않고, 평안하면 기울다고 느끼지 않는다.⁴⁸⁾

45) 『韓非子』(14) 「外儲說 右下」: “明君治吏不治民.”

46) Sydney Hook, *Hero in History: Myth, Power or Moral Ideal?*(Stanford: Hoover Institute at Stanford University, 1978), pp. 9-10.

47) 『중앙Sunday』 2014. 6. 8.(378호)

48) 『論語』 「季氏」: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저는 기능주의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이 나라의 재화가 어느 정도로 편재하여 있는지에 대하여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나 체감으로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원했던 원치 않았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재화의 미덕을 외면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19세기 말엽의 지주와 소작농의 불균등한 삶은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역할자의 바뀔만이 있을 뿐이지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사회는 이렇게 불공정한가? 막스 베버(Max Weber)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장애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미래를 걱정한 바 있습니다. 곧,

- (1) 노동자의 양심(coscienziosità) 없는 요구
- (2) 훈련되지 않은 자유 의지(undisciplined liberum arbitrium)의 분출
- (3) 매우 몰염치한 기업가(absolutely unscrupulous businessman)⁴⁹⁾

를 꼽았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역사적 유산이 없는 자본주의의 타율적 이식과 반세기에 걸친 훈련 기간을 거치면서 베버가 걱정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승배하지 않는다면서도 물질을 승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불편함, 그리고 자원 부족에 따른 생존의 치열함이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 국가들 가운데 28위로서 노르웨이의 28.9%에 지나지 않고⁵⁰⁾ 기업이 적자인 데도 임금 투쟁을 하는 노동계나, 갑(甲)의 횡포로 기업을 유지하려는 천민자본주의의 이 사회가 결코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닐 것이고, 그 행복지수가 19세기보다 높아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배와 성장의 이분법적 논리에 함몰된 한국 사회의 무익한 논쟁과 노동자와 경영자와의 갈등은 위기의 구한말이나 “한 병에 든 전갈처럼 싸우던 해방 정국”⁵¹⁾의 수준에서 결코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사회적 손실은 GDP의 27%에 이르고 있습니다.⁵²⁾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력이 GDP의 11%이며, 현대그룹이 7%, 4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총생산고가 GDP의 25%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는

49)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8), p. 57.

50) 『동아일보』 2014. 6. 27; 『조선일보』 2014. 11. 28.

51) Bruce Cumings, “American Policy and Korean Liberation,” Frank Baldwin(ed.), *Without Parallel :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New York : Pantheon Books, 1974), p. 79.

52) 박준(의),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p. 11.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의 재화의 편재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소모적 낭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율법⁵³⁾도 이미 호소력을 잃은 지금, 궁핍했던 시절의 연민이나 복구 의지는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욕망이 철학을 조롱하는 사례는 참으로 많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절입니다.

3) 지역 패권의 나라

한국 현대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명운은 지역 차별입니다. 이로 말미암은 기회 비용의 상실은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감정을 타파하는 첫 단추는 일차적으로는 도(道)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 제도를 고려 시대나 일본의 경우처럼 광역 군현제도(郡縣制度)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 좁은 나라에서 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를 없애면 지역 기피심리(phobia)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금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남부 지방과 전북 익산이 같은 문화권이요, 하동(河東)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과 순천·구례(順天 求禮)가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민들은 서로 다른 감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이 정치적 미덕인 오늘날 중대형 자치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성(省)이니 주(州)니 하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처럼 국토가 방대한 나라에서 택하는 방법이며, 그 큰 나라의 한 주만도 못한 작은 면적인 한국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도는 불필요한 행정 단위가 한 단계 더 축적하여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15개 도·특별시를 없애고 254개의 시(市)·군(郡)·구(區)를 70개 전후의 자치구를 만들려던 “2008년 8월의 구상”⁵⁴⁾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많은 인력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며 산업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렵사리 공론화되었던 광역 군현제도가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하여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뼈아픈 기회 상실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 자리 몇 개 없어지고 시·군 단체장의 수효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제를 미루는 것은 역사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로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그 시험 단계로 중선거구로 국회의원선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적 욕망에 사로 잡혀 이 책무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

53) 『신약성서』 「루카복음」 3 : 12-14.

54) 『조선일보』 2008. 9. 1.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광역 군현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 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현재 한국의 지방 자치의 수준은 만족할 만한 정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업적이나 경험 그리고 기대치로 미루어 볼 때 이제 한국의 지방 자치는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치에서 큰 정치를 배우는 수련의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생산적인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현재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멀리 보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고 있는가?

1894년의 동학혁명이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것이 결국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망국과 이어졌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일상화되었고, 전쟁에 못지않은 집단 사망 사고는 연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참화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 건강한 국가 경영만이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집단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장군 포키온(Phocion)의 말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기꺼이 훈련을 받고, 부자들이 세금을 잘 내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다.”⁵⁵⁾고 합니다.

부패한 나라, 부패한 정부, 부패한 지휘관이 이끄는 전쟁에서 승리한 부대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4년 전에 조선을 정탐하려고 왔던 일본의 간첩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너무도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⁵⁶⁾ 조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무리들에게 조국의 수호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조국을 수호하지 않습니다.⁵⁷⁾

전쟁의 승리는 그 시대 지배계급의 능력과 의지의 소산일 뿐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와 귀족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⁵⁸⁾ 한국전쟁 당시 미군전사자 21,300명(1951년 6월말 현재)⁵⁹⁾ 가운데 500명은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55) *Plutarch's Lives* : Phocion, § 23.

56) 성락훈(畝衿), 『懲志錄』(서울 : 동화출판공사, 1977), pp. 36-37.

57) *Plutarch's Lives* : Tiberius Gracchus, § 8.

58) *Plutarch's Lives* : Marcellus, § 9.

59) Dean Acheson, *The Korean War*(New York : W. W. Norton Co., 1971), p. 129.

에 선조(宣祖)가 자신들을 버리고 의주로 떠나려 하자 평양 백성들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으며 항변했습니다.⁶⁰⁾ “신의 존재가 영원하듯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영원할 것”이라던 페리클레스(Pericles)의 “전몰장병추모사”⁶¹⁾는 우국심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많은 선학들이 이를 고민했지만 가장 훌륭한 답안을 제시한 글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1776)이었습니다. 그는 좀 더 나은 삶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세금이 가벼워야 하고(easy tax)

둘째로, 입법이 예측가능해야 하고(predictable law)

셋째로, 통치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stable government)⁶²⁾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화두는 모두가 국회에 계신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4. 결론

[1] 역사에서 120년은 그리 길지도 않았고, 본질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역사가 진보하듯이 사회악도 진화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악은 모습을 바꾸어 이 시대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동학혁명의 키워드는 부패였습니다. 부패 앞에는 국민 통합도 없고 통일도 없습니다. 애국심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조국을 버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60) 성락훈(웅김), 『徵志錄』, p. 68.

61) *Plutarch's Lives* : Pericles, § 9.

62) N. Gregory Mankiw, *Macroeconomics*(New York : Worth Publishers, 2007), p. 229;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s from 1500 to 2000*(New York : Random House, 1987), p. 20.

[3] 이 시대의 지도적 위치에 국회에 대한 고언(苦言)을 드린다면, 이제는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근원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국회는 그런 여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는 “씨름선수에게까지 조롱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개탄한 바 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4]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게 바라건대, 이제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치인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정치학의 명제(命題)에 따르면, “그 시대의 국민은 자신의 분수에 가장 알맞은 정치인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되돌아가 말씀드리건대,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열린 귀를 가지고, 역사를 고민하며, 허물없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 고병찬, 『고병찬 가족 연대기』(서울 : 푸른별, 2008)
-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서울 : 鷄鳴社, 1939)
- 『論語』
- 『大藏經』(16) : “突入王宮學處.”
- 『동아일보』 2014. 6. 27
- 『梅泉野錄』
- 박준(외),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9)
- 박철현,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磻溪隨錄』
- 傅衣凌, 「明末 남방의 佃變과 奴變」, 양필승(편저),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서울 : 한나래, 1991)
- 『三國史記』
- 『書經』
- 『선조수정실록』
- 성락훈(윤희), 『懲毖錄』(서울 : 동화출판공사, 1977)
- 『星湖僊說』
- 宋俊浩, 『조선사회사연구』(서울 : 일조각, 1987)
- 신복룡, 『한국정치사상사』(하)(서울 : 지식산업사, 2011)
- 『신약성서』 「루카복음」
- 『禮記』
- 吳知泳, 『東學史』(서울 : 영창서관, 1940)
- 李敦化, 『天道教創建史』(2)(서울 :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 이익주, 「정도전의 혁신리더십 : 개혁에서 건국까지」, 『선조에게서 배우는 혁신리더십』(서울 : 문화재청, 2005)
- 이희권, 「이중환의 전라도 인식」, 『전북학연구』(1)(전주 : 전라북도청, 1997)
- 『일본공사관기록』(6)(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1990)
- 張奉善, 「全琫準實記」, 『井邑郡誌』(정음 : 이로재, 1936)
- 『全琫準供招 初招問目』
- 『조선일보』 2008. 9. 1.; 2014. 11. 28.
- 『중앙Sunday』 2014. 6. 8.(378호)
- 崔洸, 『한국의 지하 경제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1987)
- 최연식, 『창업과 수성의 정치사상』(서울 : 집문당, 2003)

『春秋』

『충무공전서』

『擇里志』

『韓非子』

황현(저), 김종일(역), 『梧下記聞』(서울 : 역사비평사, 1994)

Acheson, Dean, *The Korean War*(New York : W. W. Norton Co., 1971)

Banfield, Edward C., “Corruption as a Featur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16, No. 3(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5)

Cumings, Bruce, “American Policy and Korean Liberation,” Frank Baldwin(ed.),
Without Parallel :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New
York : Pantheon Books, 1974)

Etzioni, Amitai, *The Spirit of Community*(New York : Touchstone, 1993)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KOR_DataResearch_SurveysIndices(2012. 10. 15.)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s from 1500 to 2000*(New York : Random House, 1987)

Lewy, Guenter, *Religion and Revolution*(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Mankiw, N. Gregory, *Macroeconomics*(New York : Worth Publishers, 2007)

Mousnier, Roland, *Peasant Uprisings in 17th Century : France, Russia and
China*(London : Harper & Row Pub. Inc., 1971)

Nye, J. S.,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 A Cost-Benefit Analysis,”
i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1, No. 2(1967)

Plutarch's Lives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8)

Weems, Clarence N.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I(New York :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Wittfogel, Karl A., *Oriental Despotism*(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8)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세미나

토론

이정현 국회의원 (새누리당)

유성엽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토론문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난지 120여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발생의미는 오늘날 상황에 조명해 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혁명이 발발한 시대적 상황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라는 열강 사이에 끼었던 조선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동학혁명의 발발 원인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 오늘날 한국의 국제 정세와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동의를 하면서 저는 동학혁명의 의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동학혁명의 주체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농민들이 주축이었습니다만 그 시절 산업의 대부분이 농업이었으니 농민 혁명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사실상 “을의 혁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 일부가 권력이든 재력이든 학식이든 지위든 명예든 많이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탐욕에 가까운 집착과 비이성적, 비인간적 슈퍼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 참다 참다 정점에 이르러 다시 말해 목에 차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론이나 정신이 정립되지 않아도 역천 그 자체가 저항으로 표출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894년 당시 농민들의 삶은 지극히 열악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부 군수인 조병갑은 각종 명칭으로 세금을 추렴하였으며, 그 수탈의 정도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계상황에 이르면 넘치고 바꾸고 끊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이 발발한 것이죠. 현상타파를 넘어 생존투쟁,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재가치를 회복하기 위

한 당연한 결과가 초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실상을 보도해주는

언론도 없고 정치권의 대변도 없고 시민단체의 조직화도 없는 환경에서 희생이 커도 직접 일어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겠지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시대정신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신념 및 철학 즉 대의명분이 명확하고 그리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이. 6.25가 터졌을 때

목숨을 건 전투, 배고플 때 산업화 그리고 풍요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듯이 동학운동은 시대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여러 상황이 변하고 달라지고 부조리와 불만에 대한 수렴 방법이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정치권이든 정부든 지방자치든 소위 을의 입장을 먼저 살피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동학에서 배우고 긴장해야할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학혁명이 오늘날의 정치개혁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학혁명은 조선말기 관리들의 부정 부패에 항거한 서민층 국민들의 투쟁입니다. 당시의 부정 부패가 얼마나 심하였는가 하면, 자작농과 소작농을 가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선가미(船價米: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배로 운송할 때 드는 비용으로 내는 쌀), 가승미(加升米: 수령한 곡식을 말질하여 쉼할 때 말질을 다시 해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부족할 때 벌충하는 명목으로 내는 쌀), 곡상미(斛上米: 쥐가 먹어 곡식이 축날 때 부족한 것을 벌충하는 명목으로 내는 쌀) 등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세金的 종류가 하도 많아 정작 세금을 내는 농민들도 무슨 명목의 세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처럼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포탈할 뿐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역의 경우 6개월이 멀다하고 고을 원 등 관리들이 교체되어 교체될 때마다 갖은 수탈을 자행하니 이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발표자는 ‘역사가 발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부정 부패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소 비약이 없진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부정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조사를 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오는 현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에서는 최근 다양한 정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회야 말로 현대판 동학혁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농민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의 농민 공동체는 농사일은 물론이고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논농사를 짓는 삼남지방의 경우 ‘두레’라는 노동 조직을 구성하였는데 16세에서 55세까지 장정들은 모두 이 두레에 소속되었으며, 모내기와 논매기 등은 두레에 소속된 마을 일꾼들이 돌아가며 서로의 일을 품앗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공동체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매우 희박해져 갑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이로 인한 풍요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경쟁사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더 이상 과거의 마을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체의 실종은 개인의 소외와 이탈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공동체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 가정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이나 노인 학대, 학교와 직장에서 발생하는 왕따 문제와 그로 인한 자살률의 증가 등은 그 원인을 공동체의 붕괴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학혁명은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되새기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동학혁명의 의미를 통해 오늘날 한국정치와 사회 개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유성엽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 반부패·반봉건·반외세를 지향한 최초의 자발적·전국적 민중봉기
- 1차봉기: 평등·자유·민권(인권)을 지향한 반봉건 항쟁
- 2차봉기: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민족자존의 반침략 구국전쟁

☞ 계급적 봉건사회 붕괴 가속화, 신분질서를 뛰어넘는 민중의식 확산

- 한국근대사 방향 결정
- 대한제국기: 항일의병전쟁으로 발전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3·1운동,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등)으로 전개
- 해방이후: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민주화운동으로 계승

☞ 근대화·민주화·자주국가·조국통일의 역사적·사상적 근거/토대로 승화

○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토대

- 동학사상의 근본: 인내천(人乃天)
- ‘사람이 곧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하느님’, 즉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근본적으로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다
- 존귀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존중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고 이는 곧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
-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사람중심의 민주사회를 추구하고 자주적 독립과 함께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 반침략 민족자주화를 지향

☞ 이러한 사상적 토대가 있었기에 민중의 자각에 의한 반봉건, 반외세의 자주적 민중혁명이 가능했고, 평등/자주/민주의 역사적 개혁을 이어갔음

○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간 동학농민혁명

- 호남 고부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

고부농민봉기로 시작된 혁명은 당시 혁명군의 인본주의적 평등, 자유, 민권사상과 반봉건, 반외세 정신은 전국 민중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음

이에 호남지역은 물론, 영남지역과 충청지역에서도 봉기가 이어졌고, 경기·강원·황해도 등지에서도 혁명군의 전투와 활약이 계속 되었음

※ 현재 전국 각지에 동학농민혁명의 활동 유적들이 현존·기념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란이니 반란이니 호남만의 사건이니 하며 애써 축소·왜곡하는 것은 아직도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 동학혁명의 실패와 역사의 왜곡·단절

- 동학농민혁명은 당대의 혁명목표만을 보았을때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이에 따라, 정부의 탄압과 일본군의 몰살정책 등으로 잊혀진 혁명 또는 지워버려야 하는 사건이 되었고, 관련 자료들 역시 정부와 일제의 시각에서 기록·작성되어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은폐·왜곡되었음

더욱이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정책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마저 말살시켰고, 참여자나 유족들도 이를 숨긴채 잊혀진 역사로 살게 되었음

- 해방이후 간신히 기억을 더듬내기 시작한 역사, 지금이라도 바로세워야

1954년 최초로 건립된 전봉준 단소,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1968년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 등이 개최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 본격적인 연구와 관련행사 개최는 1994년 동학혁명 100주년 이후부터

☞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불과 10년전으로, 어찌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 재정립은 1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

-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상혁명

동학사상의 핵심은 바로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이는 봉건적 신분제 사회질서를 일거에 뒤집는 것이며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상과 혁명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할 것임

○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제정과 미완의 개정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지 110여년 만인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됨

특별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에게 과거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들에게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새로운 역사인식을 제시

다만, 이법 제정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 봉기로 제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이 된 고부봉기가 제외되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법적 흠결이라 할 것임

☞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시발사건 명시 및 기념일 제정 등 특별법 개정필요

○ 기념일 제정의 쟁점

- 기념일 제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원칙 필요(대통령 또는 총리참석 위상)

특별법 입법취지에만 맞춘다면, 구국항일의병전쟁이 벌어진 날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혁명의 시작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역사적 시작일인 고부봉기가 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무장기포 등 다른 주장들이 대두

기념일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의 반목과 대립으로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고 심지어 실체를 부정하는 등의 많은 무리까지 야기

다양한 학술적 연구는 좋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부정하고 후손들을 모욕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기념일 제정은 요원할 우려

☞ 개별 사건이나 지역적 이해를 떠나 온 국민이 대승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선양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념일 선정 기준·원칙 수립 필요

※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일 (각기 다른 일자에 가치를 부여)

- 최초봉기 : 고부봉기(1월 10일) - 정읍
- 포고문 반포 : 무장기포 (3월 20일) - 고창
- 대오 형성일 : 백산대회 (3월 26일) - 부안
- 최대 승전일 : 황토현 전투 (4월 7일) - 정읍
- 폐정개혁 : 전주성 입성 (4월 27일) - 전주
- 재기포일 : 삼례기포 (10월) - 완주
- 패전일 : 우금치 패전 (11월 9일) - 공주

〈참고: 기념일 관련 사항〉

▶ 기념일 제정 절차

- 주관부처(부서) 요구 → 행정자치부 검토 → 관계부처 의견조회(10일 이상) → 입법예고(40일 이상) → 법제심사 → 차관·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관보 공포
- 기념일은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기념일 주관부처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제정

▶ 현행 기념일과의 관계

- 무장기포일(4. 25)은 법의 날(국가기념일), 황토현전승일(5. 11)은 입양의 날(일반 기념일), 전주성점령일(5. 31)은 바다의 날(국가기념일), 우금치전투일(12. 5)은 무역의 날(국가기념일) 등 다른 부처의 국가기념일 등과 중복되어, 일반기념일인 황토현전승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은 국가기념일로 중복 제정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와 겹치지 않거나 또는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

▶ 기념사업 및 행사(정읍시)

- 최초 봉기인 2월 15일(양력) 고부봉기일을 맞이하여 만석보 인근에 있는 예동마을과 말목장터에서 출발해서 고부관아를 점령하는 재현행사를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해마다 개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5월 11일을 전후해서는, 황토현전승일을 맞아 황토현동학농민기념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가 47회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제일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가장 대표적인 행사임
- 1954년 전봉준 단소 건립,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1968년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 개최 등 가장 선도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
- 더불어 황토현전적지 성역화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등 어느 지역보다 앞서 선양과 기념사업을 추진
- 더욱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83억원 전액 국비로 4개년 동안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혁명 발상지로서 정읍시의 위상과 역할을 대변함

○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시사점 및 개혁과제

- 동학의 인내천 사상, 그리고 인본중심의 평등, 자주, 민권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민주적 가치와 일치
- 따라서, 반부패, 정치·경제 민주화, 자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굳건하고 튼튼한 “신념과 제도”를 정립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혼란과 모순에 빠진 우리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

○ 120년전 동학농민혁명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해 내기 위한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정치적 대혁명이 필요할 때

-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정세가 120년전과 매우 비슷하다는 전문가 진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여 지정학적 예측/부침 지속
남북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내부 모순 극심
남한내 신자유주의적 계급사회 팽배, 정치모순·경제모순·사회모순 심화

- 부의 집중과 경제적 양극화 → 학력과 부의 되물림 → 정치·사회적 양극화로 확대 / 심화 → 계층갈등, 사회불안, 국론분열 → 정의가 사라지고 오만과 독선,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세상 →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따라서 정치권부터 뼈를 깎는 각오로 자기모순을 타파해야 함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을 명시하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권력구조의 과감한 개편 필요”

○ 조국분단의 아픔을 딛고 민족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민중중심의 평등, 자주, 민권의 가치
사실 올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색된 남북관계 등 어려운 환경으로 무산된바 있음
비록 당장은 어렵더라도, 남북한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민중중심의 평등, 자주, 민권의 사상과 가치, 그리고 이를 접목한 행사 등을 통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꾸준히 교류·협력해 나간다면, 장차 통일이라는 커다란 민족과업을 풀어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임

〈붙임〉

동학농민혁명 주요 사건

시 기	내 용
동학의 창도와 탄압	
1860.	최제우, 동학 창도
1864.	최제우, 좌도난정의 죄목으로 대구에서 처형당함.
1864. ~ 1892	동학의 탄압에 맞서 교단 재정비와 교세 확장
교조신원운동기	
1892. 10.	공주집회
1892. 11.	삼례집회
1893. 02	광화문복합상소, 척왜양운동 /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 빈발
1893. 03.	보은집회, 금구 원평집회 / 척왜양운동
사발통문거사계획 결의	
1893. 11. 15	고부농민, 군수 조병갑에게 수세감면 호소
1893. 11.	사발통문거사계획 결의(전봉준 등 20명)
1893. 11. 30	고부군수 조병갑, 익산군수 발령
1893. 12.	고부농민, 전라감영에 등소
고부봉기와 동학농민혁명	
1894. 01. 08	고부 농민과 동학교도, 예동마을 걸곳을 시작으로 말목장터 집결
1894. 01. 09	전라감사 김문현의 유임 요청으로 조병갑, 고부군수로 다시 임임(재임명)
1894. 01. 10	전봉준과 고부 동학농민군 1천여 명 고부관아 점령 / 동학농민혁명 시작
1894. 01. 17	말목장터로 진을 옮김
1894. 02. 20	전봉준, 전라도 각지에 보국안민을 위한 창의격문 발송
1894. 02. 25	백산으로 진을 옮김
1894. 02. 말 경	보국안민창대의(輔國安民倡大義) 큰 깃발과 읍호(邑號) 깃발 등장
1894. 03. 01	동학농민군, 줄포 세고(稅庫) 파괴
1894. 03. 03	단순 가담자 귀가 : 구폐교정절목(舊弊矯正節目)
1894. 03. 10	전봉준, 사냥꾼들에게서 총기 수집
1894. 03. 11	동학농민군 3,000여명, 금구에서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이동
1894. 03. 13	전봉준, 백산집결을 위해 무장으로 이동
1894. 03. 20경	무장포고문. 전봉준, 손화중과 함께 무장에서 백산으로 출발.

1894. 03. 23	동학농민군 고부관아 재점령
1894. 03. 26~29	백산대회(호남창의대장소) / 격문(檄文)과 4대명의(名義), 12개조 기율 선포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손화중·김개남, 총참모 김덕명·오시영, 영솔장 최경선, 비서 송희옥·정백현
1894. 04. 07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 격파 후 정읍 관아 점령. 최초 전투, 최초 승리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경군(京軍) 전주성 입성
1894. 04. 08~16	전라도 서남해안(흥덕·무장·영광·함평) 점령
1894. 04. 23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과 접전. 장태 이용 승리

전주성 점령과 집강소 시기

1894. 04. 27	호남의 수부(首府) 전주성 점령
1894. 05. 01~03	전주성에서 경군과 2차·3차 접전
1894. 05. 04	청국군(淸國軍) 아산만 상륙
1894. 05. 06	일본군 인천항 상륙
1894. 05. 07	전주 화약(和約) 체결 전라도 53군현 집강소 설치 및 동학농민군 해산 합의
1894. 06. 21	일본군 경북궁 침입
1894. 06. 27	청국군과 일본군, 성환에서 교전
1894. 07. 01	일본군, 청·일전쟁 선전 포고
1894. 07. 06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간에 전주회담 개최 - 전라도 군·현 집강소 설치 - 전주성내 전라좌우도 대도소 설치
1894. 07. 26	조·일공수동맹조약(朝·日攻守同盟條約) 체결
1894. 06. 말~08.말	전라·경상·충청도 각지 봉기
1894. 08. 17	일본군, 청(2만여명)·일(1만여명)간 평양전투 승리
1894. 09. 07	김개남, 대원군의 밀지 접수

구국항일의병전쟁

1894. 09. 08	전봉준·김개남, 금구 원평에서 2차 기포 결정과 삼례 집결 통문
1894. 09. 18	동학 교주 최시형(68세) 동학 총동원령 선언 - 청산기포
1894. 09. 초 ~ 11. 초	경기·강원·충청·경상·황해도 등지에서 동학농민군과 경군·일본 연합군과 전투
1894. 10. 09 ~ 15	일본군 진압대대 인천항 상륙, 충청·전라·경상도로 진격
1894. 10. 12	전봉준 휘하의 동학농민군, 삼례에서 논산 도착
1894. 10. 12 ~ 16	손병희 휘하의 동학농민군, 논산 도착, 합류
1894. 10. 21	동학농민군, 논산에서 공주로 진격
1894. 11. 08	공주 우금치에 동학농민군과 관군·일본군 집결
1894. 11. 09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패퇴

1894. 11. 11	곰티에서 경군의 기습공격으로 노성으로 후퇴
1894. 11. 13	김개남의 동학농민군, 청주 공격 실패 후 공주로 패퇴
1894. 11. 14~19	동학농민군, 노성·논산서 일본군과 접전 후 강경을 지나 전주로 패퇴
1894. 11. 23	관군·일본 연합군 전주성 장악
1894. 11. 25~27	태인전투 패배 이후 전봉준 휘하의 동학농민군 해산
1894. 12. 01	손화중·최경선 휘하의 동학농민군 해산. 김개남(42세), 태인에서 체포당하고, 12. 3. 전주에서 효수당함.
1894. 12. 03	최경선(36세), 화순에서 체포당함.
1894. 12. 02	전봉준(41세),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당함(12.18 한양 도착)
1894. 12. 11	손화중(34세), 고창에서 체포당함.
1894. 12. 24	손병희의 동학농민군, 충주 무극에서 관군에 패퇴
1895. 01. 01	김덕명(51세), 금구에서 체포당함.
1895. 02. 09~03. 10	전봉준, 5회에 걸쳐 심문받음
1895. 03. 30	전봉준·손화중·김덕명·최경선 등 교수형 당함.

(※ 날자는 음력)

토론문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이 가기 전에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국회의장님의 깊은 안목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해주신 신복룡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교수님께서서는 정치학을 연구해오시면서 수십년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과 연구를 집중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제발표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시면서 깊은 고민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교훈으로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치현실을 되짚어보고 여기서 개혁해야할 과제를 매우 정치 하고 밀도 있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학자의 노고가 응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해 주신 점에 대해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법안을 제정해주지 않았다면 동학농민혁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국가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헌법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두고 있으며 4·19혁명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시원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권을 위해 들불처럼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결과적으로 갑오개혁을 추동하였습니다. 불완전한 갑오개혁이 성공하지 못하자 이는 광무개혁으로 이어져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지만 입헌군주제라는 진전된 형태의 정치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광무개혁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권의식에 기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3·1운동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적 이념적 뿌리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 이전에 동학농민혁명이 언급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음이 드러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정의·인도와 동포애, 민족의 단결,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균등,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이상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등치할 수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역사적 합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를 논의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동학농민혁명 2

차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이 법률에서 규정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94년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펼쳐 일어난 농민군들도 마땅히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내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이 농민군의 독립유공자 포함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농민군은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4년 동학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498명, 유족 10,563명이 명예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한 3,146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명예회복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09년 12월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등록을 통한 명예회복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 사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법안 통과

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우리민족의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남북 분단, 빈부격차의 심화에 의한 계층대립, 동서의 지역적 대립, 구세대와 신세대의 세대별 대립,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대립은 첨예해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민족에게는 새로운 정신적 이념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창도된 동학은 바로 사상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것은 통합의 가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학의 사상은 이러한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정신의 실천적 발로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우리민족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201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국비 383억을 들여 2017년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기념공원을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에 동학농민혁명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게서 우리를 묻다

- “동학농민혁명의 교훈과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문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신복룡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에서 제기하신 질문은 동학농민혁명 이래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고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가”로 요약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민란의 발생 원인에 비추어볼 때 지금에 이르러서도 부패와 분배 및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므로,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이를 위해선 정치와 국민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열강과 극동의 이해관계에 또 다시 휘둘릴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복룡 교수님의 발표에서 가장 큰 공감을 일으키는 표현은 아마도 “우리는 왜 역사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지나온 길을 들려줌으로써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이야기하는가?”라는 교수님의 질문에 누구나 저마다의 답을 갖고 있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평균적(?)인 사회과학도로서 역사를 이야기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외국의 경제제도를 애써 배우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를,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미국의 자본시장을, 독일의 이중 직업훈련 제도를, 대만과 일본의 중소기업제도를, 이스라엘과 미국의 벤처기업을 찾고 또 찾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제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스웨덴 노·사·정의 쟁투와 합의의 역사를, 미국 초기 대기업의 경영 행태와 국가의 규율을, 독일 정부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이웃 일본의 가(家) 제도와 봉건제도를, 프랑스 근대국가의 기원을 그리고 저 멀리 이오니아의 이소노미아(isonomia)까지 그들의 역사를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저에게 역사란 타자(他者)의 역사가 전부라 비난하여도 변명조차 힘들 듯 싶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회과학도에게 오늘 이 자리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가?”일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동학농민혁명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마도 세 가지 질문을 추가로 던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부분은 누가 담당합니

까? 우리나라 복지 담론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런 복지제도를 가진 국가가 복지선진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요약하면 신복룡 교수님의 “우리는 왜 역사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사학계에서 조선후기를 ‘소농사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용어는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좋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노동자사회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좋아하는 것은 조선 후기가 “소농사회여야 하는데 소농사회가 아니었다”는 쉬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복룡 교수님이 저서에서 규정하듯이 동학농민혁명의 제 1기는 “고부에서 전봉준의 아버지가 장살되었다는 사원(私怨)과 조병갑에 의한 민막(民瘼)을 계기로 하는 순수한 민란”(신복룡, 2006, 191쪽)으로서 조선후기를 맥맥히 이어오던 민란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서구의 초기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또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농업혁명에 힘입은 바 큼니다. 비슷한 시기동안 조선에서도 농업기술 발전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농업경영은 소농경영이 유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소농경영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방해받았고, 소농사회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서구산업사회는 근본적 전환을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모두 익히 알고 있는 변화입니다. 대학연구실, 방치된 창고, 가정집 주차장 등 이름 모를 곳에서 기술혁신이 만개하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치부되던 중소기업들이 신경제를 이끈 지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시대의 총아라 칭송이 자자했던 서구 대기업들의 입장도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숙련 근로자와 상생을 일구어온 일본과 독일의 성공담은 이미 귀에 익숙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 사회를 ‘중소기업 사회’나 ‘벤처사회’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후대에 역사가들이 2010년대의 한국을 ‘소기업사회’라 규정짓고, 또 어떤 이는 “소기업사회여야 했는데 소기업사회가 아니었다”고 힐난할지 두렵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생겨나야 할 변화가 유독이 한국에서만 방해받는다면 이는 이미 경제제도를 넘어선 문제, 즉 정치제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규칙을 확립하는 문제와 게임 규칙이 제대로 집행되는 문제를 다루

는 것이 바로 정치제도와 정치이기 때문입니다(Leftwich, 2007; Besley and Case, 2003). 동학농민혁명의 제 1기 직후 안핵사 이용태가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밝힌 민요(民擾)의 7대 사유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에 게임의 규칙이 얼마나 철저히 왜곡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 1기 이후의 동학농민혁명이 동학교도로까지 확대된 것은 조선 사회가 게임의 규칙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에도 봉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 문제도 이미 경제제도의 영역을 넘어선 게임 규칙을 재정립하는 문제와 기존의 게임 규칙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도대체 “동학농민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점은 경제학자가 언급하기 곤란한 사회학적 문제이기에 제 주제를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결국 게임의 규칙일 뿐이고, 실제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그 게임의 플레이어인 조직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North, 2005) 게임 규칙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게임의 플레이어가 그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의 규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게임은 펼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게임이 펼쳐질 것인가는 플레이어의 속성에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조직으로서의 농민의 속성,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동학도의 속성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동학농민 조직의 특징은 협력과 자치에 능하고, 폭력적이기보다는 개량적이고, 분열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이며 상상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방자치제라 불리는 집강소, 1차 기병 후 자체 해산과 2차 기병 후 전주화약(全州和約), 유불선을 넘어 서학도 담아낸 동학의 사상체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학이 드러낸 조직문화 또는 공동체문화는 짧게만 보아도 노베르트 베버 신부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시작하여 60~70년대 경제 성장과 6월민주항쟁을 거쳐 금모으기와 2002년 월드컵 응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역동성으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서 120년 전의 동학농민은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어왔고 지금의 우리가 바로 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복룡 교수님의 발표대로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의 우리에게 온전히 남아있으며, 우리 자신이 동학농민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동학농민의 일상적 바람이 소농사회로

귀결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듯이, 120년 후인 지금 국민의 일상적 바람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다시 정치에 달려있다는 점에 한국 정치의 위중함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각종 다양한 공동체의 바람이 충실히 반영되는 정치의 장을 기대해 봅니다. 중앙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풀뿌리 정치가 개화하길 희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120년 전 동학농민의 소망이자 한국 정치의 변함없는 과제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참고문헌

1. 신복룡(2006), 『동학농민 갑오농민혁명』, 선인
2. Leftwich, Adrian (2007), “The Political Approach to Institutional Formation, Maintenance and Change : A Literature Review Essay,” *Discussion Paper 14*, IPPG Programme Office, IDPM, Schoo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University of Manchester
3. North, D. (2005),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4. Timothy Besley and Anne Case, (2003)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oice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LI, pp. 7~73.

토론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발표에 대한 논평

(1)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고, 오늘날 한국정치의 개혁과제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복룡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특별히 더 할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몇 가지 사실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2) 조선시대의 가치 배분, 구체적으로 토지 배분의 실패 원인에 관한 문제이다.

○ 발표자는 장자상속제를 그 원인으로 들었다. 그런데 조선의 종법제는 17세기에 들어서야 뿌리를 내렸고, 조선 전기에는 딸에게도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 재산의 장자상속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 전통국가에서 토지집중은 통상 장자상속보다는 일차적으로 토지 사유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며, 개인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없다. 이론상 공전제이다. 조선이 건국될 때 개혁자들은 모든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경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왕실 경비, 관리 녹봉, 군인 경비) 농민은 토지를 분배받지만 경작권만 있고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관리와 군인은 소유권은 없고 경작자에게 토지를 받는 수조권만 인정된다. 현직에서 떠나는 관리와 군인은 국가에 토지를 반납해야 한다. 장자상속제란 이론상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토지를 반납하면 이들에게는 이론상 생계의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토지를 사유화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의 모든 토지가 사유화된다. 사유화된 토지는 집중의 방향으로 발전된다.

토지집중이 난속하게 되면 소유의 불평등도 커진다. 그런데 사전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 불평등하다고 농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취율이다. 국가의 공식적 수취율은 1/10이지만, 고려말과 조선말에는 6/10-7/10까지 상

승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국가는 토지제도를 개혁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특권층 또는 왕조를 지탱하고 있는 지배계층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도 그 과정에서 죽었다. 조선 후기 실학파는 실패했다. 명나라말 개혁가 해서도 추방당했다. 개혁은 대부분 실패한다. 이때 민란이 발생하고 왕조가 교체된다. 중국의 전통 왕조는 대략 250~300년 단위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다. 고려와 조선왕조는 특이하게도 주기가 500년이다. 제도를 상대적으로 잘 운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 그런데 조선말기의 토지제도 위기는 반드시 토지 배분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토지의 소유형식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고려나 조선왕조, 또 중국 왕조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토지 공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았다. 공전제는 국가가 토지 변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통 국가는 그런 행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만약 국가가 원칙을 고집했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토지제도는 언제나 사전제였다.

그런데도 국가가 공전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백성이 왕 앞에서 평등하다는 공전제의 이념 때문이다. 둘째, 국가의 호구제도, 조세체제, 군역체제가 모두 공전제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지제도에 맞춰 모든 국가제도를 구성한 이상적인 제도가 정전제이고, 『주례』는 그 제도론이다. 제도사의 관점에서 볼 때, 『주례』는 ‘국가’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다수의 인간을 특정한 형태로 구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주례』의 구상이 기하학적이고, 그 구성이 자연(Nature)을 따랐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다. 『주례』가 동아시아 제도론의 모범이 되고, 모든 개혁가가 그 이상에 따르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왕안석, 정도전, 정약용이 그 예이다.

그런데 『주례』의 정치적 이상은 ‘안정’(stability)에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백성들을 한 지역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즉, 땅에 구속시키는 것이다. 모든 봉건제도는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기본 개념에 충실하다. 그런데 만약 현실에 맞춰 사전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는 먼저 인민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토지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받고, 군역을 지우고, 치안을 유지하고,, 등등등, 가능하겠는가? 전통 국가의 행정능력으로는 도저히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전통 왕조가 끝까지 공전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사전제의 발달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군현제의 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상업 발전을 억제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17세기 이래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장원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토지는 사유화되어 매매되고, 임대되고, 거래되었다. 그 결과 상업혁명에 이어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다. 아시아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중국 강남의 소농경제의 생산력은 세계 최고로서, 1800년 기준 세계제조업 비중을 보면, 중국이 33.3% 서양 전체가 23.3%였다.(G. Frank, Reorient)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토지를 공전제의 이념에서 해방시키지 못했다. 인구의 증가를 토지에 노동집약도를 높여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요소투입이 한계에 이르면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경우도 토지와 사람을 분리하여, 상업이나 공업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정약용은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토지의 자연상태에 대해,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정치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 로크나 아담 스미스와 같은 사유를 할 수 없었을까? 로크(1632-1704)는 사유재산의 기원을 자연상태에서의 노동에서 찾았고, 그것의 정치적 의미는 정치적 자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재산은 정치적 악이 아니라 정치적 선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그것은 정약용(1762-1836)보다 130년이나 앞서 살았던 사람의 사유였다. 그리고 정약용의 사후 40년 이후(1876)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할 사유였다. 상업의 자유를 주장하고 기술(technology)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한 조선 후기 북학파의 사유는 보다 혁신적이었다. 그들의 방법을 따랐다면, 조선 후기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II. 동학혁명의 의미에 대한 토론

(1) 동학이념은 반서구주의 반중국주의, 반일본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고대 이후 한국 최초의 '조선주의'로 볼 수 있다. 한국은 고대 이후 압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보편주의적 문명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 측면에서는 보편주의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정신적 종속성을 뜻한다. 조선 후기의 소중화사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나의 도는 조선에서 받아서 조선에서 편다. 어찌 서학의 이름을 가지고 할 것인가?”
- “오도는 원래 유도 아니며 불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러나 오도는 유불선 합일이 나라”
- 이름하여 동학이라 하고, 동국주의를 취한다.

(2) 동학이념은 한국인 만든 최초의 종교이자 한국 백성이 만든 최초의 자기 사상이다. 동학 이전에 한국의 백성은 자기의 사상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백성이 백성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유로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다. Gramsci의 표현을 빌리면 문화적 헤게모니 없이 주체성의 확립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생적인 평등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도는 후천개벽이요 .. 선천에 썩어진 문벌의 높음과 낮음이 귀천의 등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위로써 귀천을 분별함은 곧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의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先師의 뜻을 잇기로 맹세하라”(최시형)

(3) 동학이념과 동학혁명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개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토론자는 그 중 하나로 ‘변화’(change)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신복룡 교수님도 지적하고 있듯이, 동학혁명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변혁이념이자 변혁운동이었다. 그것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변혁 노력이 실패한 다음에 최후로 등장한 변혁 에너지였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크나 큰 희생을 치르고 실패로 끝났다. 실패보다 더 뼈아픈 것은 두 가지 점이다.

첫째, 이로 인해 청일전쟁이 발생하고 조선의 망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혁명 주도층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잘 읽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해방 이후 분단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둘째, 동학혁명의 성과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학혁명의 에너지와 큰 의미를 생각할 때, 동학혁명이 후세에 남긴 구체적 결실은 매우 빈약하다. 지난 100년에 걸친 한국 역사는 기본적으로 개화파의 비전에 따라 발전해왔다. 『독립신문』의 메시지는 오늘날도 유효할 정도이다.

이런 문제점은 결국 ‘변화의 방향’에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나 개인에게 가장 나쁜 것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제국주의의 시대에 ‘조선주의’를 주장한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대에 만민평등 사상을 고창한 것은 시대의 핵심을 꿰뚫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science)이라는 새로운 지식 형태, ‘시장’(market)이라는 새로운 경제형태, 만국공법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학의 거대한 애국적 에너지는 역사 속에서 구름처럼

럼 흩어져 버렸다. 농민군의 수많은 피가 헛되이 버려졌다. 대원군의 개혁도 똑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박은식, 『한국통사』)

이러한 지적은 동학 주도층에게 완벽한 자질과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 방향이 잘못될 경우 수많은 희생은 물론이고, 다가올 역사도 왜곡시킨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는 개인이나 세력은 변화의 방향에 대한 부단한 모색이 필요하다. 정치가나 정치세력은 모든 시대에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4) 오늘날 한국정치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전기에 들어섰다. 첫째,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의 시대에 진입했다. 그 반면 한국의 사회구조는 모두 성장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메카니즘의 기능성과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저성장 시대의 증상이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이다. 연금제도 문제나 저출산 문제, 가계대출 1000조 원 문제도 저성장 시대의 문제이다.

둘째, 이런 문제가 산적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만성적으로 지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중심제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결과 국정운영에서 중대한 과제는 대부분 국회에 의결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중요한 국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제출 법안의 평균 통과 시일은 평균 2년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일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국회의 야당은 모든 대통령 국정 agenda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는 그 대표적 부문중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야당의 반대로 법정기일에 맞춰 정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일반 법안들도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천권이나 정치자금 등 의원에게 제공할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에 무력한 상황이다.

그 반면 국회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을 추동할 힘이 부재하다. 즉 국회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다.(vetocracy)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는 이원적 권력이 서로 대립한 결과, 국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결권과 집행권을 일치시키는 정치 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토론문

이현출 국회의원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1. 동학의 관심은 종교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 시기는 갑오년, 사상적 기반은 동학, 주도세력은 농민층, 사건의 성격은 혁명적 운동이므로 ‘동학농민혁명’으로 명명
- 갑오년의 동학혁명은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당시의 정치·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무력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
- 동학이 갖는 현실지향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단순함 종교의 차원을 넘어 ‘東學布教’나 ‘東學革命(運動)’이 실제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실개혁 운동
- 창도의 원인에서 보면, 수운은 개체 영혼의 구원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치·사회의 모순에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하려고 함
- 토론자는 동학혁명을 정치적 맥락에서 바라보며 오늘날 동학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시대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2. 동학의 배경

- 발제문에서는 동학혁명의 배경으로 당시 삼남에서 일어난 민란에 주목하고 있음
- 민란의 발생 배경으로 신교수님은 부패와 수탈의 고리, 가치 배분의 실패, 신분의 벽, 지역차별, 조국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을 들고 있음
- 이 중에서도 토론자는 세칭 만석보 수세에 대한 농민의 저항, 만경평야 개간지에 대한 세금징수, 조규순 공덕비 건립기금 추렴 사건 등이 기폭제가 된 것에 주목하고 있음
- 당시 조선왕조 후기의 정치상황을 보면 고종이 즉위한 1864년부터 1894년 4월까지 3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란이 무려 41건에 달할 정도로 왕조의 체제 모순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던 시기임

- 이 시기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이 기폭제가 되고, 동학이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면서 혁명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확대됨
- 동학혁명군은 弊政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지방 貪官汚吏들의 징계로 三政紊亂으로 인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
- 동학혁명의 실천적 강령이 바로 弊政改革案이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농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정치분야에서는 단연코 탐관오리의 처벌, 매관매직하는 간신배 처벌, 대원군의 복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방관과 아전들의 뇌물 등 횡포를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함
- 경제분야에서는 三政의 문란과 상업, 특히 유통질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 洑稅, 均田稅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세와 대동미 운송 관원들의 횡포 등을 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삼음
- 사회분야에서는 연좌제 폐지, 권력형 비리 척결, 電報局 폐지, 동학교도의 신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음. 특히 권력형 비리는 관리나 세력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사채를 남발하고 각종 비행을 저지려는 행위를 말함

3. 동학혁명의 현대적 함의

- 120년 전의 조선과 오늘의 한국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왜 역사를 반추하는지 알게됨
- 동학의 문제는 결국은 민생의 문제로 귀착됨
 - 민주화 이후 사회적 투명성이 많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체감지수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 부패는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여 구성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공정 심리를 키워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됨
 - 특히 관료의 부패는 사전적·사후적 예방조치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부패인식지수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분배정의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음
 - 신교수님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부족함’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불평하는 것임

- 특히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의 해소 등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지역주의 문제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숙제라는 점에서 마음이 무거움을 느낌
-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하여 지역주의를 풀어보자는 신교수님 충정을 이해함

4. 맺는말

- 동학혁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선호를 수용하여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하며 정치사회적 통합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임
-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다양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양극화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MBN 여론조사(2012년 8월 24-25일 조사)에서 시대정신으로 28.1%가 사회양극화 해소, 17.6%가 ‘복지 강화’, 16.2%가 ‘사회대통합’, 14.3%가 ‘정의·평등’을, 9.4%가 ‘경제민주화’를 들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역시 동학혁명 당시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
- 현재 한국은 미래로 가는 길에 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 문제는 국가의 중심에서 난국을 헤쳐 나가고 최상위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치권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이미 대한민국 정치공동체는 세계화, 양극화, 고령화, 다문화화 등 다층적 충격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충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14년을 보내며 동학 12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봄
- 2015년 새해에는 굵직한 선거가 없는 해로써 정치개혁에 전념할 수 있는 해이며,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溫故知新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